제367회국회 (임시회)

국회본회의회의록

제 2 호

국회사무처

2019년3월11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상정된 안건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1

○의장 문희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오늘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 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0시04분 개의)

1.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대표연설

○의장 문희상 의사일정 제1항 국정에 관한 교 섭단체대표연설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연설을 듣도록 하 겠습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나오셔서 연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표 의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 포 여러분!

문희상 국회의장님과 선후배 · 동료 의원 여러 분!

그리고 이낙연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입니다.

올해는 3·1 운동 100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년 전 우리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긴 여정을 시작했습니 다. 고난과 시련, 승리와 영광의 여정이었습니다.

35년간 나라를 빼앗긴 채 살았고 전쟁과 분단 의 아픔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힘 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냈습니다.

최재형을 아십니까?

최재형, 1860년 함경도 경원에서 노비의 자식

으로 태어났습니다. 11살 때 연해주 지신허 집을 나와 먼 길을 걸어서 포시에트 항구까지 갔습니 다. 배가 고파 쓰러져 있던 최재형을 러시아 부 부가 데려다 키웠습니다.

최재형은 선장이던 양아버지를 따라 전 세계를 돌아다녔고 마침내 사업가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 니다.

그는 힘들게 모은 재산을 독립운동을 위해 아 낌없이 내놓았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 거를 지원했고 임시정부 설립을 도왔습니다. 1920 년 일본군에 체포되었고 탈출을 시도하다 총에 맞아 순국하였습니다.

연해주의 최재형은 곳곳에 있었습니다. 서울과 평양, 대구와 광주, 상해와 동경에서 나라를 위해 묵묵히 헌신한 민초들이 있었기에 우리는 해방의 감격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였 습니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나라를 재건한 것도 우리 국민이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나라를 세계 11위의 경제 강국 으로 올려놓았습니다. 지난해에는 전 세계에서 일곱 번째로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오천만 명 이 넘는 국가, 이른바 '30-50 클럽'에 합류했습니 다.

이러한 산업화의 기적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국민은 세계사에 유례없는 민주주의의 역사도 만들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 협받을 때마다 함께 떨쳐 일어섰습니다.

3·1 운동의 정신은 4·19 혁명을 거쳐 부마항 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으로 이어졌 고 마침내 촛불혁명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이제 이 자랑스러운 나라를 함께 잘사는 나라, 평화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2017년 9월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온 국민이 불안해 했고 전 세계도 전쟁의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상상도 못 했던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고 우리는 평화의 길을 열었습니 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도 이끌 어 냈습니다. 또한 남북은 9·19 군사합의를 통 해 육해공에서 일체의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등 사실상 불가침 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기만 합니다.

2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명문화된 합의 도출은 못 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실현 의지를 재확인하고 평화 구축과 비핵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공동의 인식을 확인했습니다. 북·미 양측이 서로의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협상을 통해 최종 타결에 이를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왕복 120시간 기차 여행도 놀랍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스무 시간 이상의 비행직후 곧바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 직접 설득하려 했던 점도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이전과 다른 새로운역사를 만들어 내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협상의 성공을 이끌 어 내는 우리의 촉진자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 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당사자입 니다.

지금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과정은 남·북· 미 정상 간 대화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는 깊은 신뢰와 심리적 유대감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이끌어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하게 하고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을 문 대통령과 대화하도록 밀어주는 일종의 3각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결심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 통령뿐입니다.

분단 70년, 불신과 대결의 역사를 신뢰와 공존의 역사로 바꿔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북한 동창리 동향은 매우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잘못 진전되면 향후 협상에 큰 난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북한은 현명한 판단을 통해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보수 진영도 이제 평화의 문을 함께 열어야 합니다. 한반도 평화는 진보 진영만의 의제가 아닙니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가 보수 진영만의 의제도 결코 아닙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을 통해 비핵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는 어떠한 이견도 없습니 다.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해 왔던 과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당리당략보다 앞서는 것은 국익입니다. 조선시 대 병자호란을 불러온 것은, 구한말 나라를 빼앗 긴 것은 우리가 분열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차대한 민족사의 대전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수와 진보가 힘을 합할 때 평화의 시간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래야 좌절의 역사가 아닌 성공의 역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새 역사를 쓰기위해 초당적인 협력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 12년 만에 이룬 일입니다. 정말 엄청난 성과입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은 3만 달러 시대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불평등과 양극화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만의 일이 아닌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밀레니얼 사회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18세부터 29세에 해당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51%가 자본주의보다 사회주의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심각한 불평등이 만들어 낸 현상입니다.

불평등 문제는 미국 정치권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민주당 내에서는 이른바 슈 퍼 리치에 대한 과세 논쟁이 한창입니다. 연간 110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최 고 70%까지 올리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몇 년 전부터 기본소득에 대한 논 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우 리에게도 강 건너 불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우리 사회의 소득 불평등 또한 지 속적으로 커졌습니다. 2017년 기준으로 상위 10% 가 전체 소득의 50%를 가져갑니다. 우리의 소득 불평등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불평 등과 양극화는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양극화의 근본적인 해법은 포용국가입니다. 포 용적 성장은 결코 최저임금 인상이 전부가 아닙 니다.

저소득층의 생활비 부담을 덜어 주고 사회안전 망을 촘촘히 하자는 것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 성을 확대하여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거안정을 강화하여 집 걱정 없이 살게 하는 것 입니다. 공교육을 정상화해서 교육비 부담을 줄 이는 것입니다.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을 확대하며 실업안전망을 구축하자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 상 과정에서 경제 전반을 세밀히 살피지 못한 점 도 있습니다. 조금 더 가다듬고 보완하겠습니다.

그러나 포용적 성장은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포용국가는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통해 완성할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은 제조업 르네상스와 벤 처·혁신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만 드는 과정입니다.

중국의 한 해 R&D 총액이 얼마인지 아십니 까? 무려 40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의 5배입니다. 중국은 이렇게 막대한 투자를 통해 우주과학, 바 이오, 양자통신 등 첨단과학 분야 경쟁력을 키우 고 있습니다. 지난 1월에는 미국도 가 보지 못한 달 뒷면을 탐사해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중국 경제의 급부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닙니다. 그 러나 그 속도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주요 선진국들도 오래전부터 경제체질을 개선 해 왔습니다. 미국은 '제조업 르네상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중국은 '제조 2025', 일본은 '모 노즈쿠리'등의 산업 전략을 통해 제조업 혁신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정부는 구조개혁 대신 손쉬운 길 을 택했습니다. 바로 부동산과 토건 경제를 통한 경기부양입니다. 세금은 낮추고 대출 문턱을 낮 춰서 집값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통해 일시적인 경기 호황과 고용창출 효과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책으로 얻은 것은 막대한 가계 부채였습니다. 가계부채는 2007년 말 665조 원에 서 지금 1534조 원으로 늘었습니다. 지난 10년에 걸쳐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입니다.

제조업의 총체적 위기도 초래했습니다. 지난 20년간 500조 원이 넘는 무역흑자를 냈던 조선산 업이 구조개혁 실패로 순식간에 위기를 맞았습니 다. 한때 세계 4위까지 넘봤던 자동차산업은 작 년에 7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반도체도 언제 중국 에 따라잡힐지 모릅니다.

이제라도 제조업 르네상스 전략을 더 적극 추 진해야 합니다. 예전보다 못하지만 제조업은 여 전히 수출과 일자리의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주력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합니다. 2030년까지 매년 1조 원씩 소재 및 부품 산업 R&D에 투입하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 이, 2차전지 투자도 늘리겠습니다. 2028년까지 인 공지능 반도체 등 선행기술 개발에 2조 원을 투 입하겠습니다.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지역상생형 일자리도 확 산시켜야 합니다. 기업 경쟁력을 고려한 노동자 의 적정 임금과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주거 등 생활비 부담을 줄여 주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국 제조업은 새로운 활로를 열 수 있고 해외로 나간 기업을 국내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살리기 위한 일터 혁신도 필 요합니다. 스마트공장을 늘리고 산업단지를 일하 고 싶은 일터로 만들어야 합니다. 스마트공장은 올해 4000개에서 2022년 3만 개로 대폭 확대될 계획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게 추진 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은 혁신성장의 속도를 높여 제2의 벤 처붐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지난해 벤처투자는 3조 4000억 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문재 인 정부 들어 매출액 1000억 이상 벤처도 59곳이 나 증가했습니다. 매출 1조 원 이상 유니콘 기업 은 세 곳에서 여섯 곳으로 늘었습니다.

2022년까지 벤처 지원을 위해 12조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유니콘 기업도 20개로 늘 리겠습니다. 벤처투자에 대한 금융시스템도 손질 하겠습니다. 국내 6개 유니콘 기업에 대한 투자 액의 95%가 해외 자본이라는 사실은 우리 금융

회사들이 반성해야 될 대목입니다. 앞으로 벤처 금융을 융자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벤처기업에 한해 차등의결권을 허 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도 혁신성장의 지렛대로 적극 활용할 것입니다. 지난해 말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 규제혁신 4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규제 샌드박스가 올해 1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습니다. 아직 초기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속속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내 수소차 충전소 등 17건에 대한 사전규제가 풀렸습니다. 연말까지 100건 이상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될 것입니다.

혁신성장은 공정경제가 뒷받침되어야 더 큰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혁신과 공정은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시장이 공정해야 중소·벤처기업들이 더 많은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경제를 통해 많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수많은 을들이 법과 제도의 보호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국회는 지난해 하도급법을 개정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인건비 상승 등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어도 대기업에 납품단가를 높여 달라고 요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한 중소기업은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해 납품가격을 8% 올릴수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납품단가 인상은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의 부담도 이전보다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정부 여당은 대기업과 자율협약을 통해 가맹계약을 해지할 때 내야 하는 위약금을 대폭 낮췄습니다. 대기업 총수일가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경제는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해 공정거래법, 경제민주화 입법을 적 극 추진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받아들일 것은 과감하게 받아들이겠습 니다. 공정경제가 정착될 때 우리 경제는 보다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사회의 일자리 양극화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이 안 되면 이류 인생 취급을 받습니다. 지난해 대기업 정규직 평균임금은 400만 원이었습니다. 반면 중소기업 비정

규직은 151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격차가 존재합니다. 1차 노동시장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25%인 500만 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2차 노동시장에는 3배나 많은 1500만 명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저임금과 고용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는 대통령과 정부의 힘만으로 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해법은 경제사회의 모든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뿐입니다.

최근 우리는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광주지역 노사민정은 광 주형 일자리에 합의했습니다. 1년 8개월 동안 무 려 네 번이나 대통령 행사가 취소되었을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지만 미래를 위해 대타협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 론이고 23년 만에 국내에 완성차 공장이 만들어 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탄력근로제와 카풀-택시 서비스도 극적으로 합의를 만들어 냈습니다. 특히 카풀-택시 서비스합의는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 해결의 모범 사례가 될것입니다.

노동시장 양극화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노동계는 '해고는 살 인'이라면서 유연성 확대를 거부하고, 경제계는 안정성을 강화하면 기업에 부담이 된다고 반대했습니다.

저는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모델에서 상생의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덴마크는 기업의 인력 구조조정을 쉽게 허용합니다. 근속연수가 길다고 해서 고용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대신 직장을 잃어도 종전 소득의 70%에 해당하는 실업급여를 최대 2년간 제공하고 전직훈련 등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 줍니다.

우리도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높이는 사회적 대타협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먼저 실업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대폭 강화합시다. 현재 실업급여는 월평균 152만 원씩 4개월만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덴마크와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고용불안에 대비하려면 현재 9조원인 실업급여를 26조 원 정도로 확대해야 합니다.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을 최소한 2030년까지 완성할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추진

합시다.

이렇게 노동안정성을 강화하는 대신 노동유연 성도 높여야 합니다. 업무량의 증감에 따라 탄력 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아가 경기변동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인력 구조조정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 노동자는 해고에 대한 걱정을 덜고,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탄력적으로 인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무 엇보다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임금체계도 개혁해야 합니다.

먼저 대기업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줄여야 합니다. 고임금을 받는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노조가 3~5년간 임금인상을 자제하는 결단을 내 려 주어야 합니다.

SK하이닉스는 협력사와 임금을 공유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는 직원들이 임금 인상분의 일정액을 내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 가하여 협력사와 하청업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을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확대할 필요 가 있습니다.

둘째, 임금체계의 단순화도 필요합니다.

국내 대다수 기업의 임금체계는 기형적입니다. 기본급은 최소화하고 각종 성과급과 상여금을 늘 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봉급 비중을 줄이고 직 무급과 직능급을 확대해야 합니다. 경기나 실적 변동을 반영해서 성과급을 지급하는 방안도 필요 합니다.

셋째, 공공부문에 임금공시제도를 도입하겠습 니다.

이를 통해 직종별・직무별・직급별 수당을 투 명하게 공개하는 등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구조개혁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도 꼭 실현해야 합니다.

청춘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어야 합니다. 빛나는 이상을 꿈꿀 수 있는 특권을 누 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춘이 인생의 황 금시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좌 절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절망하게 만든 것은 기성세대와 정치의 책임인 만큼 그 해결도 기성세대와 정치가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청년의 눈으로 청년 문제를 바라보겠 습니다. 청년미래기획단을 통해 청년 문제를 살

피겠습니다. 청년들이 직접 참여해서 정책을 만 들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청년정책을 총괄할 기구도 만들겠습니다. 청년기 본법도 반드시 통과시켜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 이겠습니다.

말로만 청년을 미래의 희망이라고 하지 않겠습 니다.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스스로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청년들과 함 께 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정치개혁입니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갈등 조정과 사회 통합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치는 오히려 갈등을 조 장하고 국민 통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최근 일부 정치인들의 언행은 정 말 걱정스럽습니다. 헌법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켜야 할 국회의원들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 안 에서 대놓고 5·18 민주화운동을 왜곡하고 날조 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는 등 가 짜뉴스를 통해 1700만 국민이 이뤄 낸 촛불혁명 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또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 한 문재인 정부를 좌파독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로 진실을 왜곡하고 민주주의의 역사 를 통째로 부정하는 것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입 니까? 이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외면과 불 신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치가 신뢰와 품격을 되찾아야 합니다.

'역사의 종언'을 쓴 후쿠야마 교수는 정치의 실 패 때문에 미국의 데모크라시, 민주주의가 비토 크라시로 전락했다고 진단했습니다. 상대 정당의 주장과 정책에 대해 무조건 반대함으로써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는 불능의 정치체제가 비토크라시입니다. 우리도 비토크라시의 늪에 빠 져들고 있습니다. 정쟁만 있고 타협은 없습니다.

이제 국회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대화 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시켜야 합니다. 제가 여당 원내대표로서 협치의 제도화를 제안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싸울 땐 싸우더라도 국민을 위해 일 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아쉽게도 생각했던 것만큼 협치가 이뤄지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의미 있는 성과도 많았습니다. 작년 7월, 여야 5당 원내대표는 초당적 방미외교 를 했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가동했습니다. 작년 8월과 11월에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 나 민생과 국정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 기를 나눈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그래 서 여야 협의를 통해 많은 민생경제 법안을 처리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여야가 대치하고 극렬하게 맞설때 각자의 진영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성과는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서로 대화하고 타협했을때 국회는 국민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고 많은 입법성과도 있었습니다.

지난 6일, 우리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감했습니다. 그날 오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미세먼지 공동대응을 제안했고 오후에 3당원내대표가 만나 미세먼지 5법 처리에 합의했습니다. 2년 가까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안 되던 법안을 이례적으로 일주일 만에 처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의회민주주의의 힘입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을 통해 정의롭고 공정한 민주주의를 외 쳤습니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여야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먼저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법은 대통령 친인척과 국회의원, 고위 공직자들의 비리를 수사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80%가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5년째 국회 에 발이 묶여 있습니다. 대통령 친인척 비리 등 을 엄격히 수사하자는 법인데 통과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음은 국정원법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국정원 국내정보담당관, 소위 IO 제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모든 정부기 관, 국회, 심지어 기업까지 출입하면서 불법적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인권을 침 해했던 국정원 조직을 없앤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정원은 오직 국익과 국민만을 위해 일하는 기 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이러한 국정원 개혁을 완 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검경 수사권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0 년간 이 문제에 대해 검찰과 경찰은 첨예하게 맞 섰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사상 처음으 로 부처 간 수사권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조속히 처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에서 꼭 처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선거제의 개혁은 정치 불신을 해소할 개혁의

방아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지난 20년 간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주장해 왔습니다. 지역 주의를 해결하고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하자는 것입니다. 과감한 개혁을 통해 한국 정치의 물줄 기를 바꿉시다. 정치권 모두가 국민과의 약속 이 행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후배 · 동료 의원 여러분!

분단 70년 만에 찾아온 평화의 기회를 살리지 못한다면 한반도에는 다시 전쟁의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전쟁이냐 평화냐의 갈림길에서 우 리의 선택은 단 하나뿐입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도 우리 사회의 극심한 혼란을 초래할 시한폭탄입니다. 그 폭탄이 터지기 전에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정치가 바뀌어야 합니다. 남북문제도 노사 문제도 사회 갈등도 결국은 정치를 통해 풀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건립 100년을 맞아 20대 국회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갑시다.

어제까지 우리는 각자 작은 원을 그렸습니다. 그 속에 나를 가두고 나와 다른 상대방을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큰 원을 그려야 합니다. 나와 내 편이 아닌 모두를 포용하는 통 합의 원을 그려 나갑시다.

긴 시간 경청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수)

○**의장 문희상** 홍영표 원내대표 수고하셨습니 다

오늘은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 의원(258인)

강 병 원 강 석 진 강 석 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관 영 김 광 수 김 광 림 김 규 환 김 도 읍 김 동 철 김 두 관 김 명 연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상 훈 김 상 희 김 삼 화 김 석 기 김 선 동 김 성 수 김 성 식 김 성 원 김성 태 김 세 연 金成泰 김 성 환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용 태 김 재 경 김정우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정 훈 김종민 김 종 대 김 종 석 김종회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년 김 태 흠 김 학 용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문 진 국 맹성규 박 광 온 문 희 상 민 병 두 박 경 미 박 대 출 박 덕 흠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병 석 박 범 계 박 선 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용진 박 완 수 박 완 주 박 인 숙 박 재 ठ 박 정 박 주 민 박 주 선 박 지 원 박 주 현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청 원 서 삼 석 서 영 교 설 훈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언 석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옥 주 신 동 근 신 경 민 신 보 라 신 창 현 신 상 진 신 용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민 석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여 상 규 염 동 열 오 신 환 우 원 식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원 유 철 원 혜 영 유기준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승 회 유 은 혜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상 현 윤 소 하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후 덕 이 개호 이규회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상 민 이상헌 이석현 이 양수 이 언 주 이 완 영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장우 이정 ㅁ] 이정현 이종걸 이종구 이종배 이 주 영 이진복 이 차 열 이채 익 이 철 규 이 철 희 이 학 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해 찬 이 후 삼 이 현 재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장 제 원 전 재 수 전 현 희 전 해 철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 병 국 정성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우 택 정 운 천 정 태 옥 정 유 섭

조경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주 광 덕 주 승용 조 정 식 지 상 욱 주 호 영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연 혜 최 운 열 최 최 인 호 최 재 성 추 경 호 추 미 애 추 혜 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문 종 홍 영 표 홍 의 락 익 표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홍 황 주 홍 황 회

○개의 시 재석 의원(215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 창 일 강 훈 식 고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은 희 권 칠 승 금 태 섭 기 동 민 김 경 협 김 광 림 김 광 수 김 도 읍 김 규 환 김 두 관 김 병 관 김 동 철 김 민 기 김병기 김 부 겸 김 상 훈 김 상 희 김성식 김 성 수 김 성 원 金成泰 김세연 김 성 환 김 순 례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용 태 김정우 김 영 호 김 재 경 김 정 재 김 정 호 김 종 대 김 종 민 김 종 회 김 종 석 김 종 훈 김 중 로 김 철 민 김 학 용 김 진 표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해 영 김 현 권 김 김 현 아 나 경 원 남 인 순 노 웅 래 도 종 환 맹성 규 문 진 국 문 회 상 민 병 두 박 경 미 박 대 출 박 광 온 박 맹 우 박 덕 흠 박 범 계 박 병 석 박 선 숙 박 영 선 박 완 수 박용진 박 인 숙 박 재 호 박 박 주 민 정 박 주 선 박 주 현 박 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훈 소 병 훈 설 손 혜 원 송 갑 석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신 경 민 신 동 근 신 보 라 신용 현 신 창 현 심 기 준 심 상 정 심 재 권 심 재 철 안 규 백 안 상 수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우 상 호 오 신 환 우 원 식 원 유 철 유 기 준 원 혜 영 유동수 유 민 봉 유성엽 유 승 민 유 은 혜 유 의 동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소 하 윤일 규 윤 재 옥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윤 후 덕 이개호 이규희 이 만 희 이 상 돈 이 상 민 이 동 섭

이상헌 이용주 이용호 이 원 욱 이 은 권 이장우 이 은 재 이 인 영 이정미 이 주 영 이정현 이종배 이진복 이 찬 열 이 채 익 이 철 규 이철희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혜 훈 이 현 재 이 후 삼 0] 훈 인 재 근 임 이 자 임 재 훈 임 종 성 장 병 완 장 석 춘 장 정 숙 전 재 수 전 해 철 전 희 경 정 갑 윤 정병국 정 동 영 정 성 호 정세 균 정양석 정용기 정 유 섭 정태옥 조 경 태 조 배 숙 조 승 래 조 응 천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승 용 주 호 영 지 상 욱 채 이 배 천 정 배 최경환(평) 최 교 일 최연혜 최 운 열 추 미 애 최 인 호 최 재 성 추 경 호 추 혜 선 표 창 원 하태경 한 정 애 홍 익 표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의 락 홍일 표 홍 철 호 황 영 철

○산회 시 재석 의원(217인)

강 병 원 강석 진 강석호 강 창 일 강 효 상 강 훈 식 경 대 수 고 용 진 곽 대 훈 곽 상 도 권 은 희 기 동 민 김 관 영 김 광 수 김 동 철 김 도 읍 김 두 관 김 민 기 김 병 관 김 병 기 김 병 욱 김 부 겸 김 삼 화 김 상 희 김 석 기 김성수 김성식 김성원 金成泰 김성환 김세연 김 승 희 김 영 우 김 영 주 김 영 진 김 영 춘 김 영 호 김 정 호 김정우 김 정 재 김종 대 김 종 회 김종민 김 종 석 김 중 로 김 진 태 김 진 표 김 철 민 김 태 흠 김 태 년 김 한 정 김 한 표 김 해 영 김 현 권 김 현 아 나 경 원 노 웅 래 도 종 환 맹성 규 문 진 국 민병두 문 희 상 박 경 미 박 광 온 박 대 출 박 맹 우 박 명 재 박 범 계 박 병 석 박선숙 박 성 중 박 영 선 박 완 수 박 완 주 박용진 박 정 박 주 현 박지 원 박 찬 대 박 홍 근 백 승 주 백 재 현 백 혜 련 변 재 일 서 삼 석 서 영 교 서 청 원 설 훈 송 갑 석 성일종 소 병 훈 손 혜 원 송 기 헌 송 석 준 송 언 석 송 옥 주 신 경 민 신 용 현 신 동 근 신 상 진

신 창 현 심기준 심 상 정 심 재 권 안 규 백 안 민 석 심 재 철 안 호 영 어 기 구 엄용수 염 동 열 오 신 환 오 영 훈 오 제 세 우 상 호 우 워 식 원 혜 영 원 유 철 유동수 유민 봉 유성엽 유 승 희 유 은 혜 유 승 민 유 의 동 유 재 중 윤 관 석 윤 상 직 윤 영 일 윤 일 규 윤 재 옥 윤 소 하 윤 종 필 윤 준 호 윤 호 중 이 개호 이 동 섭 이 만 희 이 상 돈 이규희 이상헌 이양수 이 상 민 이석현 이용득 이용주 이용호 이 언 주 이 워 욱 이 은 권 이 은 재 이 인 영 이 장 우 이정미 이정현 이 종 걸 이종구 이종배 이진복 이 찬 열 이철희 이 채 익 이 춘 석 이태규 이 학 영 이 학 재 이 해 찬 이 현 재 이 후 삼 이혜훈 0] 훈 인 재 근 임 재 훈 임 종 성 임 이 자 장 병 완 장 정 숙 장 석 춘 장 제 워 전 해 철 전 현 희 전 희 경 정 갑 윤 정 동 영 정성호 정세 균 정 양 석 정용기 조 배 숙 정 운 천 정 유 섭 정 태 옥 조 승 래 조 응 천 조 훈 현 조 정 식 주 광 덕 주 승 용 지 상 욱 채 이 배 최 교 일 최경화(평) 최 운 열 최인호 추경호 최 재 성 추 미 애 표 창 원 하 태 경 한 정 애 함 진 규 홍 영 표 홍 익 표 홍 의 락 홍 일 표 황 영 철 황 회

○청가 의원(23인)

강 길 부 권 미 혁 김 경 진 김기선 김무성 김성 찬 민 경 욱 민 홍 철 서 형 수 송 영 길 송 희 경 윤 한 홍 이 수 혁 이재정 이종명 이 헌 승 전 혜 숙 정 인 화 정 진 석 정 재 호 정 춘 숙 제 윤 경 최도자

○국회 참석자

사 무 총 장 유 인 태 의 사 국 장 권 영 진

○출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국 무 총 0 낙 연 리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홍 남 7]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은 유 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영 민 유

통 일 부 장 관 조 명 균 법 무 부 장 관 7] 박 상 두 국 방 부 장 관 정 경 행정안전부장관 김 부 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 종 화 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0] 호 후 보건복지부장관 박 능 환 경 부 장 관 조 명 래 고용노동부장관 0] 재 갑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김 영 춘 종 학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

○출석 정부위원

외교부제1차관 혅 조 산업통상자워부차관 정 승 일 여성가족부차관 김 회 경 국토교통부제1차관 박 선 호

【보고사항】

○의안 제출

김석기 의원 발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김성찬·윤종필·임이자·김승희· 이은권 · 주광덕 · 김재경 · 윤한홍 · 성일종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채이배 · 이동섭 · 김삼화 · 김수민 · 정병국 · 이찬열 · 금태섭 · 김관영 · 주승용 · 송기헌 · 신용현 · 김중로 · 이태규 · 오신환 · 임재훈·김동철·최도자·박선숙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워 대표발의)

(2019. 3. 7. 이종배·정유섭·김성원·장석춘· 곽대훈 · 김상훈 · 김승희 · 윤한홍 · 박완수 · 최연혜 · 김석기 · 곽상도 · 민경욱 · 박맹우 · 정용기·홍일표 의원 발의)

3월 8일 정무위원회에 회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명재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박명재·이종구·박성중·김정재· 김광림 · 권성동 · 강석호 · 원유철 · 이학재 · 추경호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이원욱·김영진·김경협·최재성· 김병관 · 변재일 · 강훈식 · 심기준 · 김병기 · 김현권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정성호·백혜련·유관석·한정애· 김정우 · 박정 · 김해영 · 박홍근 · 강병원 · 이찬열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8일 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조승래·정재호·이후삼·서형수· 신경민 · 김종민 · 강훈식 · 김태년 · 서영교 · 박용진 의원 발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승래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조승래·정재호·이후삼·서형수· 신경민 · 김종민 · 강훈식 · 김태년 · 서영교 · 박용진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교육위원회에 회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성찬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김성찬·성일종·김석기·곽대훈· 이명수・박덕흠・윤종필・홍문표・정태옥・ 이종배 의원 발의)

민주시민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소병훈·김병기·송갑석·남인순· 윤일규ㆍ이용득ㆍ서영교ㆍ김상희ㆍ김병욱ㆍ 변재일 의원 발의)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김병관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김병관·홍익표·이규희·김현권· 홍의락 · 송갑석 · 이상헌 · 이종걸 · 우원식 · 권미혁 · 이원욱 · 김정우 · 설훈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8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 3. 7. 정부 제출)

3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정성호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정성호·백혜련·윤관석·한정애· 김정우 · 박정 · 김해영 · 박홍근 · 강병원 · 이찬열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배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이종배·정유섭·김성원·장석춘·

곽대훈·김상훈·김승희·윤한홍·박완수· 최연혜·김석기·곽상도·민경욱·박맹우· 홍일표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 회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진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김경진·조경태·장병완·황주홍· 장정숙·박주민·채이배·안민석·정동영· 정인화 의원 발의)

3월 8일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박성중·김선동·이명수·홍문표· 정태옥·이종구·박덕흠·김승희·최교일· 윤재옥 의원 발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임이자·이종배·정용기·이채익· 이명수·정태옥·김성찬·장석춘·강석호· 강효상·문진국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보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신보라·윤종필·추경호·김순례·김광림·강효상·이종구·박덕흠·김선동·정용기·박명재·김규환 의원 발의)

이상 3건 3월 8일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서형수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서형수·김현권·신동근·김해영· 김상희·민홍철·이철희·이종걸·김병욱· 조승래·권칠승 의원 발의)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대전충남혁신도시지정촉구 결의안

(2019. 3. 7. 홍문표·박성중·유민봉·성일종· 위성곤·박덕흠·김태흠·이은권·안상수· 정용기·이명수 의원 발의)

이상 2건 3월 8일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유승희 의원 대표발의)

(2019. 3. 7. 유승희·강병원·김정호·박정· 박홍근·백재현·서영교·송영길·송옥주· 윤후덕·이석현·이찬열·주승용 의원 발의) 3월 8일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

국회의원(홍익표) 징계안

(2019. 3. 7. 김관영·권은희·김동철·김삼화·

김성식 · 김수민 · 김중로 · 박선숙 · 박주선 · 신용현 · 오신환 · 유승민 · 유의동 · 이동섭 · 이언주 · 이찬열 · 이태규 · 이혜훈 · 임재훈 · 정병국 · 정운천 · 주승용 · 지상욱 · 채이배 · 최도자 · 하태경 의원 요구)

3월 8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 발의)

(2019. 3. 7. 박주민·설훈·김병욱·정인화· 안호영·신동근·김병관·이인영·김해영· 소병훈·제윤경·전해철·강병원 의원 발의) 3월 8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회부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신창현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신창현·제윤경·임종성·심재권· 이종걸·서삼석·설훈·김철민·윤준호· 박찬대 의원 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기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김민기·김병기·손혜원·설훈·신창현·이용득·금대섭·박주민·표창원· 최재성·백혜련·권미혁·이인영·기동민· 김영진·송옥주·조승래 의원 발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강훈식·강병원·김민기·맹성규·신창현·안호영·우원식·윤관석·이규희·이원욱·정재호 의원 발의)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송석준 의원 대표 박의)

(2019. 3. 8. 송석준·김승희·김상훈·심재철· 소병훈·엄용수·박덕흠·함진규·이은권· 민경욱·이현재·유동수 의원 발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표창원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표창원·신창현·김병기·송기헌· 김철민·김경협·김상희·노웅래·김영호· 박정 의원 발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권칠승·위성곤·정인화·전혜숙· 오제세·정세균·황희·김철민·박정· 서형수 의원 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임종성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임종성·김철민·김영진·송석준·

소병훈・함진규・강훈식・안호영・신창현・ 이용득 의원 발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의락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홍의락·송갑석·김성환·우원식· 김병관·김병욱·김정호·오제세·백재현· 전혜숙 의원 발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윤호중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호중·김현권·김철민·서영교· 이원욱 · 강훈식 · 윤관석 · 송기헌 · 이학영 · 김병기·김해영·윤영일·이찬열 의원 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 · 안규백 의원 발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워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워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 · 김현권 · 이용득 · 소병훈 · 조승래 ·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김관영·박주선·김수민·주승용· 김삼화 · 박선숙 · 유의동 · 최도자 · 전혜숙 · 임재훈 의원 발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현재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이현재·홍철호·김성원·윤종필· 김영우 · 박순자 · 김광림 · 민경욱 · 주광덕 · 임이자 · 박덕흠 · 김선동 · 윤영석 · 함진규 · 송석준·이양수·원유철 의원 발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019. 3. 8. 정부 제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김관영·박주선·김수민·주승용· 김삼화・박선숙・유의동・최도자・전혜숙・ 임재훈 의원 발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순례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김순례·신보라·김선동·원유철· 서청원 · 이종명 · 정유섭 · 윤영석 · 홍문종 · 이명수 의원 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순례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김순례·신보라·김선동·원유철· 서청원 · 이종명 · 정유섭 · 윤영석 · 홍문종 · 이명수 의원 발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김도읍·정태옥·유기준·이완영· 김석기・김태흠・강효상・김규환・민경욱・ 김세연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어기구·김철민·맹성규·박정· 서삼석 · 신창현 · 안호영 · 위성곤 · 윤일규 · 이훈ㆍ이규희ㆍ조승래 의원 발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어기구·김철민·맹성규·박정· 서삼석 · 신창현 · 안호영 · 위성곤 · 윤일규 · 이훈·이규희·조승래 의원 발의)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어기구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어기구·김철민·맹성규·박정· 서삼석·신창현·안호영·위성곤·윤일규· 이훈·이규희·조승래 의원 발의)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 윤일규·금태섭·이찬열·김철민·권칠승· 장정숙 의원 발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윤일규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윤일규·신동근·안호영·백재현· 변재일·김현권·이용득·소병훈·조승래· 김병관·안규백 의원 발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 윤일규·금대섭·이찬열·김철민·권칠승· 장정숙 의원 발의)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 윤일규·금태섭·이찬열·김철민·권칠승· 장정숙 의원 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 윤일규·금태섭·이찬열·김철민·권칠승· 장정숙 의원 발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문진국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문진국·정갑윤·송희경·김정재· 이철규·장석춘·김선동·이용득·김용태· 정운천·임이자·민경욱 의원 발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전혜숙·김병기·김영진·송옥주· 윤일규·금태섭·이찬열·김철민·권칠승· 장정숙 의원 발의)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 의원 대표발의) (2019. 3. 8. 홍익표·강창일·김민기·김병관· 김영호·김한정·소병훈·송갑석·이재정· 인재근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에 의원 대표 발의)

(2019. 3. 8. 한정애·강훈식·김경협·김영진· 서형수·설훈·이철희·조정식·신창현· 변재일·강길부·강병원·김상희·전현희· 유승희·김태년·서영교·송옥주·홍영표· 안규백·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39건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음

○서면질문서 제출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에 관한 질문서 (2019, 3, 7, 금태섭 의원 제출)

○서면답변서 제출

WTO 다자간 협상 및 CPTPP에 관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서

(2019. 3. 11. 정부 제출)

(질문서와 함께 부록으로 보존함)

○보고서 제출

2018년도 언론중재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2019. 3. 8. 언론중재위원회 제출)3월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송부